

‘오만한 巨與’

예산안 단독 처리 이어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 타협 외면 대결 국면 심화...정국 격랑속으로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가 현실화 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2석의 거대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지난 주말 민주당과 내년도 예산안의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음에도 ‘형

님 예산’ 등에 대해 타협을 외면하고 과공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해 버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강행처리 외종에도 야당과의 합의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 여야가 합의했던 예산안까지 세부조정 과정에서 반복한 것이나 늘어났다.

여기에 1천억원씩 삭감키로 한 ‘형님 예산’과 ‘4대강 정비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172석의 거대 여당으로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특히,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거여의 일방독주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당장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예산안 강행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은 전정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예산 전정에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여세를 몰아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쟁점법안도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많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연달 연초에는

외국 방문을 삼가 달라고 비상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쟁점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이라며 절대 양보 불가라는 배수진을 쳤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와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신설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 자본 소유를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이 발표되면 한미 FTA도 본격적인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 등 국정원 업무법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처리도 주요 쟁점법안도 밀어붙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예산안 및 감세법안 처리에서 참패한 만큼 쟁점법안에서는 결코 밀릴 수 없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숫자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여야의 대결 국면은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국은 격랑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외국 방문을 삼가 달라고 비상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쟁점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이라며 절대 양보 불가라는 배수진을 쳤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와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신설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 자본 소유를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이 발표되면 한미 FTA도 본격적인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 등 국정원 업무법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처리도 주요 쟁점법안도 밀어붙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예산안 및 감세법안 처리에서 참패한 만큼 쟁점법안에서는 결코 밀릴 수 없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숫자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여야의 대결 국면은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국은 격랑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금융위기 극복·북핵 해결 등 3국 간 지속적인 협력 틀 마련

한·중·일 정상회담 의미

일본 후쿠오카에서 13일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3국간 협력의 틀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줄곧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되던 3국 정상회담이 아세안+3 회의와는 별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북핵문제 해결, 지역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아소 다로 총리 등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여러 실무급 회의 개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협력 약속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은 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強)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내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

번 회담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초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의 하나로 한·중·일 금융정상회의의 개최를 제안한 것이 3개월여만에 실현되는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우선 금융위기와 관련, 철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공조노력과 함께 같은 경제권 국가들간 연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아소 다로 총리 등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여러 실무급 회의 개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협력 약속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든든한 달러 ‘파이프 라인’을 구축함에 따라 그만큼 금융위기 재발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분석이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리더십, 정체성 혼재로 내년 4월 재보선에 맞춰 손학규, 정동영, 김백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가 지난 13일 강원도의 대룡산 인근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교수시절 제자들과 난상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력 민주’

리더십 부족 비판 속 정동영·손학규 컴백론 술술

“제1 야당으로서의 전략도, 강단도, 비전도 없다.”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및 예산안 강행 처리를 무기력하게 바라본 본 민주당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다.

대선 패배 이후 1년 동안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와 구성원들의 무기력여가 더해지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 지지율은 10% 중반에도 못 미치는 등 민심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으며 의석수 부족과 소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결여 등으로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죽을 썬지 않았던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으로 꼽히고 있다. 대선에 이어 총선에도 참패한 민주당

은 지난 7월6일 전당대회에서 화합형인 정세균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단 패배로 와해된 당을 추스르고 중도와 진보 진영을 묶어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라는 주문에서였다.

그러나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여기에 386 진영으로 출범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우선 충돌 정국에서 방관자에 머물렀던 민주당은 환율정책 실패 논란을 빚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촛불 집회 괴담 진압의 논란에 섰던 어정수 경찰청장의 해임에 실패했다.

여기에 중부세 완화 저지에 실패한 데 이어 감세법안 및 예산안 등도 거대 여당에 무기력하게 밀리면서 대여투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무기력여에 당내에서는 당장 조기 전당대회론이 머리를 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김근태, 천정배, 이

종걸 등 당내 비주류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연대는 ‘야당내 야당’을 표방하고 나서 당내 노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연말 정국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이슈 법안 저지 결과에 따라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 지도부 교체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릴 전망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 내후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면 정세균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보궐 선거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일궈내지 못한다면 정세균 체제는 막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의 정동영, 손학규 컴백론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 야권 공조마저 곳곳 파열음

민주당의 야권 공조 전선에 먹구름이 잔뜩 졌다.

각종 쟁점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고된 ‘포스트 예산정국’에서 거여(巨與) 한나라당에 맞서려면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할 형편이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는 것.

우선 자유선진당과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북한인권법 등 상당수 법안에서 입장차가 적지 않은데다 ‘한나라당 2중대 발인’ 공방으로 감정의 골이 깊게 팬 상태다. 지난 5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측이 ‘한나라당 2중대’라고 원색적으로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선진당이 “민주당은 생떼당, 폐법당”이라고 반격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재반격하는 등 양당은 거친 공방을 벌였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는 최소한의 도리와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막말을 퍼부어놓고 사과도 없는 당과는 더이상 공조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달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민주연합론’ 제안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민주노동당과의 공동전선도 지난 5일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감세법안 처리, ‘예산안 12일 처리’에 합

의해 준 뒤 틀어지기 시작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에 동참한 패배주의 정당”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반(反) MB 전선’ 구축을 기치로 손을 잡았던 시민단체와의 공동보조 움직임에도 민주당의 ‘예산안 12일 처리’ 합의 후 균열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우리가 ‘2중대’로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당도 한나라당에 합사리 편승하지 못할 것이고, 민노당과도 오해가 상당부분 풀렸다”며 “야당과의 공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대표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끝까지 싸우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3일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청주시 상당산성 잔디광장에서 열린 충북도당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대회에서 “이명박 정

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서울만 살려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중부세를 완화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 2조7천억원이 부족해졌다”며 “중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예산 삭감분을 벌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성공시켜 지방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당도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진학설명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 | | |
|--|---|---|
|  강경태 <small>신촌대학교 교수</small> |  홍세민 <small>동국대학교 교수</small> |  유기미진 <small>한양대학교 교수</small> |
|  임아름 <small>한양대학교 교수</small> |  인이주은 <small>한양대학교 교수</small> |  김정호 <small>한양대학교 교수</small> |

3주 집중 특강! 예비 대학원 (의·치·약) 준비생 대상

● 체계적이고 철저한 특강

● 내신과 졸업생 지원사항

● 특강에 대한 상담이벤트

1월 2일

기본개설 (19:00~21:00)

MDPass 醫학원

문의 263-5453 (북구청 맞은편) **문의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충북도당에서 주최하는 2008년 12월 13일(토) 19:00~21:00

서울고시학원

www.gosig.com 514-4560